

도시주민과 산림·임업

- 목재 수요 확대를 위한 과제 -

사카구치 세이고(坂口精吾) / (재) 임업과학기술진흥소 「산림의 만물 상담실」 실장

1941년 와카야마현(和歌山県) 출생. 미에(三重)대학 농학부 졸업. 64년 농림성 입성. 임야청, 코우치(高知) 외 각 영림국, 산림총합연구소에서 근무. 2001년부터, (재) 임업과학기술진흥소 주임연구원으로서 「산림의 만물 상담실」 담당. (사)임정총합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공저로 「임업과 산림관리의 동향」 (전국농림 통계협회 연합회) 등. 현재 취미는, 해외의 아름다운 거리, 바다, 숲을 여행하는 일.

1) 서 언

최신, 『일본 <아열대화 선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다. 저자는, 열섬현상 등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21가지 현상을 제시하면서, 일본은 이미 아열대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아열대화에 의해, 말라리아나 텐구열(天狗熱 일명 斷骨熱 ; 병원체의 바이러스가 모기에 의해 매개되어 발병하는 전염병, Dengue fever)을 매개하는 모기의 생식 영역 확대 등 「허약한 무균국가 일본」에서의 전염병 발생 위험성은 확실히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희박하다.....이 책자는, ...일본인을 자각시키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산화탄소 6%의 삭감을 약속했던 「교토회의」로부터 벌써 6년이 지나, 그 약속을 수행해야 하는 제1구속기간인 2008년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난화 방지, 특히 삭감량 6% 중 3.9%를 담당하는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낮은 것 같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농림수산성에서는 2003년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 흡수원 10개년 대책」(이하, 10개년 대책이라 함)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구온난화방지 산림 흡수원 대책 추진에 있어서의 국민지원에 관한 연구



회·중간보고」(2003년 7월, 이하, 연구회 중간보고라 함)에서는 산림정비에 대한 세원 활용의 타당성이나 국민적인 지원의식 양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의 사고를 정리하고 있다.

분명, 온난화방지는 국민의 지원·협력 없이는 이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이라고 해도 바야흐로 일본인구 1억 2,000만의 약 8할은 대도시든 지방도 시든 대부분이 도시주민이다.

어떻게 해야, 10개년 대책에서 말하는 산림정비나 국산재 이용 촉진에 있어 도시주민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참가·협력을 얻어갈 것인가, 이것 또한 10개년 대책 추진 상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국산재의 수요 확대 등 도시주민과 산림·임업의 긴밀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2) 도시재생과 국산재 이용

「교토회의」의 약속에서는, 이산화탄소 삽감량 6% 중 3.9%를 산림의 흡수 기능에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산입 대상이 되는 산림은, 「1990년 이후에 시행된 신규 식림, 재조림 및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이라는 제한이 있다.

『산림·임업백서』 등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의 신규조림·재조림지는 한정되므로, 적절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이 주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조림의 방치 등 열악한 경영환경을 반영한 현상의 산림경영 수준대로 라면, 흡수량 3.9%를 대폭 밀돌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10개년 대책을 통해 건전한 산림의 정비를 비롯, 4개 항목의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정책인 「목재 및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추진」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즉, 성숙도를 더해가고 있는 국산재의 순환이용 시스템을 재구축해 가는 것이다.

이미 「주변 산의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는 모임」 등 지역자원의 순환이용에

대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국산재의 자급율은 약 18%라는 저수준에 그쳐, 국산재 이용에 도시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시나 도시주민들에게 국산재의 이용을 확대토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그것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있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등에 좀 더 국산재 이용을 도모하는 전략·시책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일본 도시의 거리는 난잡하고 보기 흉하다고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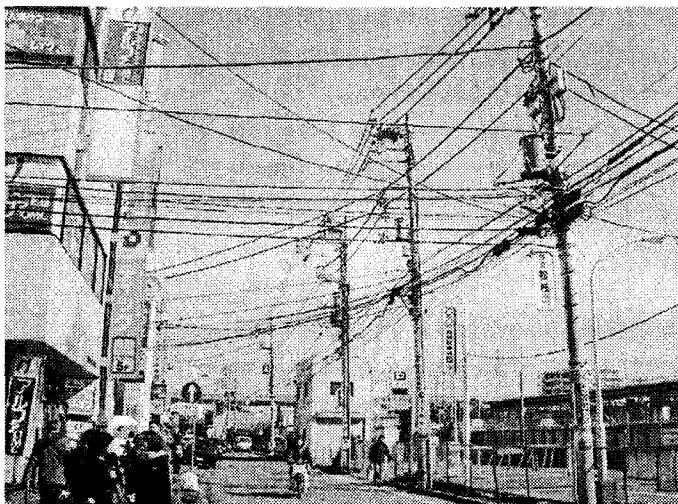
아오키 히토시(青木 仁)씨는, 「일본 거리의 부조화」의 원흉은, 바로 도시 계획법이나 건축기준법 등 건축·주택·도시에 관해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제도와 구조라고 말한다.

아시하라 요시노부(芦原義信)씨에 따르면, 「외부보다 내부 공간질서의 상위성을 인정하는 일본인 특유의 사고방식과 거기서 비롯된 외부공간이나 건물 외관에 대해 개의치 않는 성향」에 의한 것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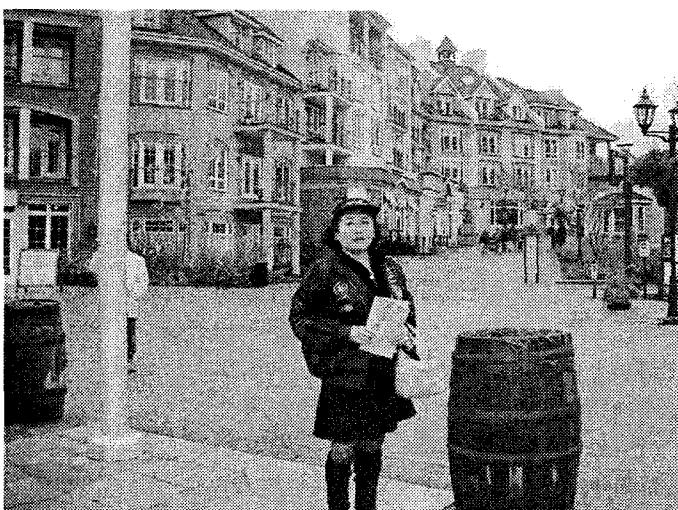
마츠바라 류이치로(松原隆一郎)씨는, 「어째서 일본의 경관이 이처럼 흉하게 되었는가. 일상 경관을 더럽히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어떠한 사회인가를 묘사하려는 목적」으로 『잃어버린 경관-전후 일본이 이룩한 것-』을 저술하고 있다.

상기의 식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구 시가지 등 거리 경관의 황폐화는 경기 악화와 함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거미줄처럼 온통 둘러쳐진 전선·전화선, 무참한 정도로 베어진 가로수, 넘쳐나는 광고전단지·간판·자동판매기, 좁은 보도와 조화롭지 않은 보도교, 방치된 자전거, 세탁물이 널려진 맨션 기타 등등, 전기사업자, 도로관리자, 상점주, 주민 등 각자가 「반성하는 일 없이」 시가 경관의 황폐화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사진①).



사진① 온통 둘러쳐진 전선·전화선



사진② 트램 블란트 거리 (캐나다 퀘벡주)

이러한 시가경관의 황폐는 마음의 황폐와 범죄의 온상화로 이어져 간다.

경범죄를 방치해 두면 결국 흉악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깨어진 창 이론 (역주: 유리가 깨진 빌딩 창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빌딩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관리되지 못한 재산은 파괴나 범죄의 좋은 먹이가 되어 순식간에 빌딩 전체 나아가 지역 전체의 황폐화로 이어진다는 이론, 즉 깨어진 창에서 공동체의 붕괴로 이르는 도식을 설명한 이론)」이 뉴욕에서 실증된 바와

같이, 이 시가경관의 황폐는 일본 범죄증가에 의한 「안전신화의 붕괴」 와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활력을 잃어 시가경관의 황폐가 진행되는 구시가지 등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진 제 외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전주·전화선의 지중화(地中化), 간판·전단지·자동판매기의 철거, 가로수 바꿔 심기 등과 같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관민 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사진②).

한편,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에 「도시개발법」(1969년)이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된 배경은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평면적인 저층목조주택 등을 입체화함으로써 제한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는데, 2002년에는 경제구조 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용도지역, 고도제한, 용적률 등 관련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긴급정비지역을 개발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 법률에 의한 도시재생은, 오피스 맨션의 과잉공급으로 공실율 증가나 임대료 하락이라는 「2003년, 2008년 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중시의 무기적 고층 빌딩가의 난립으로 치우쳐가고 있다.

이것이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 한정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대형상점 등의 이전·철수는 다시 구시가지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킬지도 모르는 일이다.

본래 긴급을 요하는 도시재생이란, 공동화와 경관황폐가 진행되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구시가지를, 주민의 직장·주거의 장으로서 개성적이고 쾌적하며 안전한 「아름다운 거리」로 재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는 것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또한 목조주택의 건축·리폼, 오픈·카페나 가드닝에 쓰이는 간벌재 제품의 이용 등 국산재 시장의 개척으로 이어지며, 나아가서는 국산재의 순환이용을 통해 산림정비가 촉진되게 된다.

이미 타츠노시(龍野市)나 아이즈와카마쓰시(會津若松市) 등의 지방도시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사례가 보여지고 있다.

농림수산성으로서도, 10개년 대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관계성청, 지방자치체, 민간기업 등과의 협휴 아래,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활용한 「나무의 거리 만들기」 등 본래의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을 더욱 더 전개하면서, 국산재 시장개척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도시주민과 산림·임업과의 벽

지금까지 공동화 및 경관 황폐화가 진행되는 구시가지 등의 도시재생에 있어 국산재 수요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도시재생에 「나무의 거리 만들기」 등과 같은 정책을 전개한다고 해도,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추진될 수가 없다.

도시주민의 지원의식을 양성하고, 국산재 순환이용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산림·임업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자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 참가의 산림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 산림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시민단체나 도시주민의 수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주민은 국산재 순환이용의 중요성에 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이나 인식을 갖고 있을까?

그 인식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로, 올해 6월, 사이타마 슈퍼 아리나에서 개최된 「목재 페어」(전목연(全木連) 주최)에서 「숲과 나무에 관한 퀴즈대회」가 실시되었다.

다소 강제적인 요청도 동원하여, 사이타마시 근처 도시주민인 197명 남녀노소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표①은, 지면 관계상 퀴즈의 설문과 결과가 국산재의 순환이용에 관계된 것만을 게재한 것이지만, 목재가 온난화 방지의 우량 소재라는 사실이나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결과를 보면, 도시주민과 산림·임업 간에는 여전히 두터운 벽이 존재한다.

도전자의 대부분은 체점결과를 보고, 「숲이나 나무에 대해 좀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 라며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다.

바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벽」을 만들어 새로운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회 중간보고에서 말하는 10개년 대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지원의식의 양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매스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등 도시주민의 산림·임업에 대한 이 “벽”을 허무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4) 맷음말

긴급간벌 5개년 대책, 사업의 집단화·단지화를 향한 산림계획제도의 개정, 산림정비지역 지원교부금, 녹색고용 인력 육성대책 등 건전한 산림정비 추진에 대한 지원시책이 전개되고, 또한 FSC 등의 산림인증을 취득하는 임업사업체나 NPO 등 자원봉사자단체의 증가, 이른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강 상류에서의 관민일체 활동 체제는 정비·강화되어 왔다.

표① 「숲과 나무에 관한 퀴즈」 설문과 결과

문6. 우리들은 주택자재나 종이·펄프 등에 연간 약 1억 m^3 의 목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국내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국산재)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답) ① 80% ② 60% ③ 40% ④ 20% (정답율) 63%

문7. 목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있는 온난화 방지의 우량소재라고 일컬어 집니다. 그렇다면 잘 건조된 목재의 중량에서 차지하는 「탄소」의 비율은 어느 정도 일까요?

(답) ① 70% ② 50% ③ 30% ④ 10% (정답율) 26%

문8. 2002년의 신설주택 착공 호수는 약 115만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중 목조가옥이 차지하는 호수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답) ① 66% ② 58% ③ 44% ④ 35% (정답율) 26%

문9. 목조가옥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한 평」 당 사용되는 목재의 양은 어느 정도 일까요?

(답) ① 약 $2m^3$ ② 약 $1m^3$ ③ 약 $0.6m^3$ ④ 약 $0.3m^3$ (정답율) 28%

문10. 단독 목조주택을 지을 때, 총 건축비(토지대는 제외)에서 차지하는 목재의 재료비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답) ① 60% ② 50% ③ 40% ④ 20% (정답율) 44%

[해답은 문말에 제시]



그러나, 생산재의 유통·가공·이용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체제의 정비가 한층 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가령, 간벌재 이용에서는, 토목·치산용 자재, 합판, 어초(魚礁) 등의 용도개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율은 40% 미만에 그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수요측면에서 안정적·계획적으로 자재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일본 특유의 임업생산에 있어서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즉, 소량·분산·간단(間斷)이라고 하는 자재의 유통은, 간별 제품인 책상·의자 등의 생산코스트를 기준 제품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환경프레미엄을 부담할 의도가 있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이다.

즉, 임업생산구조의 개혁이라는 크고 중요한 과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이다.

단, 임업·임산업 내부의 구조개혁만으로 국산재의 순환이용 시스템이 확대될 리는 없다. 국산재의 순환이용 회전속도는, 자급률 18%로서 지금이라도 당장 멈출지 모르는 것이 현 상태다.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강 하류에서의 국산재 시장개척과 강 상류에서의 국산재로의 흡인력 강화 도모가 급선무이다.

이미 미야자키현(宮崎県) 등에서는 현산재(県產材)의 중국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전략 등 새로운 국산재 시장 개척에 주력함과 동시에, 국내에 서도, 공동화나 경관황폐가 진행되는 도시 및 도시주민을 타겟으로 한 「아름다운 거리·나무의 거리 만들기」 등 국산재의 시장개척 전략 및 시책 전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

〈표①의 각 설문 해답〉

[문6 : ④ 문7 : ② 문8 : ③ 문9 : ③ 문10 : ④]